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55호
2022. 5. 9

정책동향

- 건설 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 정책적 지원 시급
- 「건진법」 상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활용 촉진 방안 마련해야

산업정보

- 건설업 노동생산성 하락, 산업 효율성 떨어져
- 건설업의 수익성 하락과 침체, 올해도 재현될 듯

건설논단

- 관심(關心)과 간섭(干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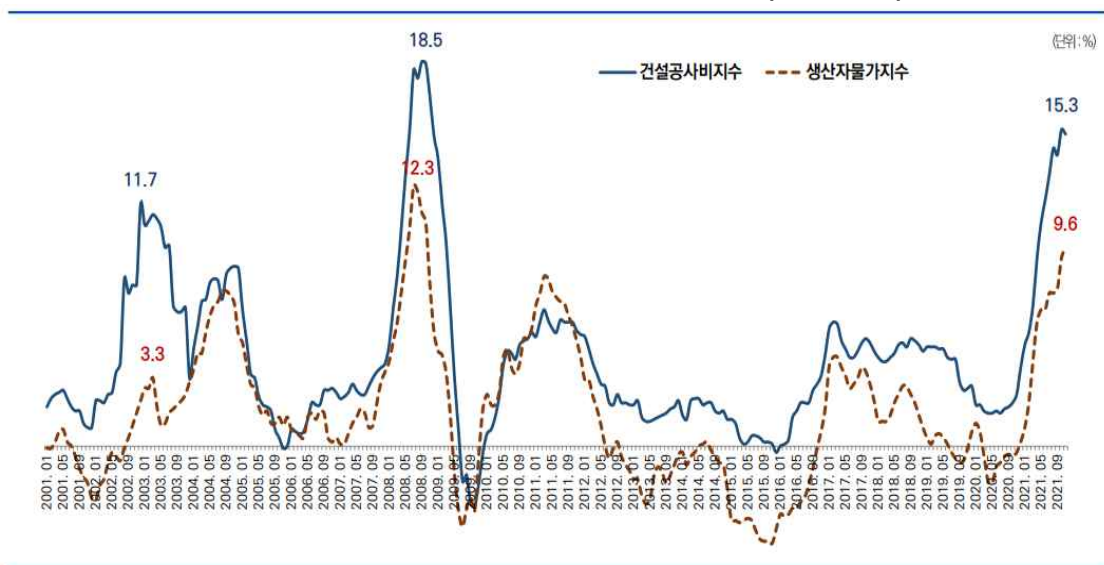
건설 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 정책적 지원 시급

- 단기 정책과 함께 지속적 투자 정책 확보와 금융 지원도 필요 -

2021년부터 시작된 비용 상승,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를 증폭

- 최근 국내의 건설 자재 공급과 비용 상승의 문제는 2021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를 증폭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국내 건설물가의 최근 상승률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중이며,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생산자물가지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그림 1> 생산자물가와 건설물가 증감률 비교(최근 20년)



주: 전년동월대비증감률, 2015=100. 자료: 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자료: 전영준(2022),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지난 1년 이상의 건설 자재 파동의 주요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COVID-19로 인한 강력한 수요의 문제가 발생한 것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각 국가는 강력한 경제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들의 팬데믹 대응에 따라 주요 전략 중의 하나인 인프라 건설 투자가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한 건설 자재의 수요 자체가 증가함.

- 둘째, 자재 생산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이유가 됨. 건설 자재 부문은 친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 영역으로 생산 중단 혹은 생산성 감소를 겪고 있어 이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발생함.
- 셋째, 선적 컨테이너의 부족 및 지체 문제도 있음. 건설 자재의 적시 생산과 관련 없이 COVID-19 등에 의한 물류 문제로 건설 자재의 적시 공급에 차질을 가져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항구가 폐쇄되었거나 대기로 인한 처리 능력에 문제가 발생함.
-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재비 등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금속, 연료 및 트럭 운송 비용이 인상되었고, 공급망 역시 혼란이 가중됨. 우크라이나 전쟁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공급에 영향을 주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코로나19 재출현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침.

■ 계약방식과 조건에 따라 리스크 상이, 공공보다 민간에 더 큰 영향 미쳐

-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방식과 조건 등에 따라 자재비 등의 상승 리스크가 달라지며, 공공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공공공사는 원자재 대부분이 관급성 자재이며, 총액계약이지만, 단가계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단품 슬라이딩 등의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보완이 가능함.
 - 물론, 조달청 등이 자재 공급 문제를 이유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할 경우는 계약자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급 문제와도 연결되어 공공 부문의 어려움도 큰 실정임.
- 민간 공사의 경우 총액계약 혹은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하는데 총액계약을 체결한 기존 공사의 경우 현재의 자재비 폭등과 공급 차질은 매우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종합건설기업의 입찰 참여 의사결정과 면밀한 공사비 견적이 필요하나, 업계의 수주 여건이나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자재비 등 공급 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의 경우 당초 입찰 금액(현재 기준)과 향후 자재 구매와의 차이로 인해 손실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입찰 참여를 자제해야 함.
 - 특히, 중소건설기업의 경우 대형기업에 비해 손실에 대한 흡수력과 견적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함.
- 하지만, 중소건설기업은 기업 생존을 위해 적자 수주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수주 이후 계약자는 프로젝트 관리(낭비제거 등)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중소건설

기업이 대부분인 건설산업에서 이러한 고난도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건설 작업의 자동화, 재작업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역시 단기처방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큰 과제에 속한 것이라 여의치 않음.

■ 단기적 정책과 함께, 산업의 신뢰성 확보하는 지원 정책 시급

- 정부는 단기적 정책과 함께 건설 물량 투자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산업의 신뢰 확보와 금융 등 지원 정책 중심의 부가적 구사도 필요함.
- 현재, 각종 협단체는 공공 및 민간공사 자재가격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의 즉각 반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 시달, 원자재 수급난의 충격 완화를 위해 부담금 및 부가세 등의 한시적 감면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그 외 산업에 공공건설투자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주는 정책 발표(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가 필요함. 즉, 단위사업의 리스크를 물량 확보 증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의 신호가 요구됨.
 - 미국의 경우, 자재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인력의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음. 미국을 지탱한 X-세대의 노동인력이 COVID-19를 계기로 기록적인 은퇴를 하였기 때문임.
 - 하지만, 상술한 단위 사업의 리스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부분은 향후 12개월 동안 충분한 신규 비즈니스(특히 정부 재정사업)가 창출될 수 있다고 신뢰¹⁾하며, 이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정책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도 필요함.²⁾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단,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정책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현재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저리융자 예산은 5조 600억원(저리자금 최대대출 한도는 60억원/사)임.

최석인(선임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1) 미국 건설협회(AGC)가 건설기업 약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은 향후 17개 시장 부문에서 15개 부문에서 입찰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2) 전영준(2022),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활용 촉진 방안 마련해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방식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필요 –

■ 건설사업 안전관리비용³⁾

-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도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 두 안전관리비용의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됨.
 -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공공사업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실태

-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설계내역 또는 도급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⁴⁾이 미계상된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남.
 -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로 나타나 토목사업에서 높게 분석됨.

3) 본고는 “최수영·이승우(2022),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4)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의미함.

- 안전관리비 7가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축사업에서는 정기안전점검비 계상 비중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토목사업에서는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상 비중이 47.1%로 가장 높았음.

유사 경비 비목 계상기준 비교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와 비교해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 관련 비용을 계상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관련 비용 계상을 지원함.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계상 방법	일괄요율	직접 계상 + 요율	직접 계상	②항목 : 요율 타 항목 : 직접 계상
계상 비목	경비	직접공사비 and 경비	경비	직접공사비 or 경비
제도적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 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 1]~[별표 3]	시행규칙 [별표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
비고	사업종류별 규모별 요율 기준 제시	직접공사비 산출기준 및 공사종류별 최저 요율 제시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 기준 제시	구체적인 산출 기준 제시 X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을 위한 요율방식 도입 검토 필요

-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발주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를 충분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요율방식 도입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임. 이에 발주기관에서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임.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건설업 노동생산성 하락, 산업 효율성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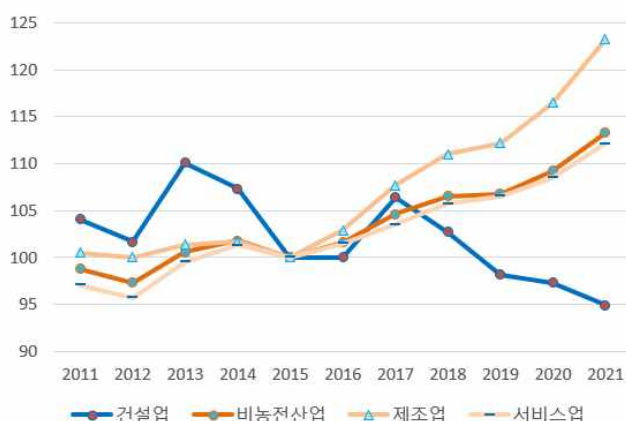
- 노동생산성지수 지속 하락, 생산성 저하 요인도 증가 -

■ 건설산업 노동생산성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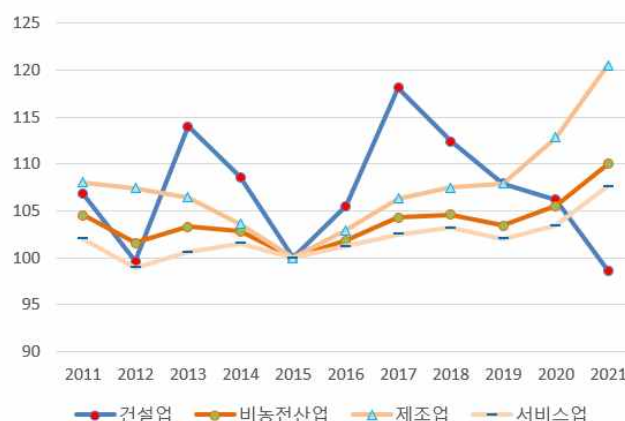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2021년 기간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은 향상됨.
 - 우리나라 전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113.3(2015년 100 기준)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⁵⁾
 - 산업별로는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큰 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도 전년 대비 5.8% 증가한 123.2로 나타남.
- 그러나, 건설산업의 2021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94.9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물적 노동생산성지수 역시 큰 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7.2% 감소한 98.6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한 명이 1시간에 생산하는 부가가치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수의 감소는 그만큼 기업과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임.
 - 물적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한 명이 1시간에 생산하는 생산량의 상대적 비율로, 생산효율의 향상 정도, 기술 수준의 변화 등 주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됨.⁶⁾ 즉, 물적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근로자의 숙련도 저하, 생산기술의 비효율성 등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1> 건설산업 노동생산성 추이(2011년~2021년)

(a)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b) 물적 노동생산성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 및 산업생산 기준).

5) 한국생산성본부(2022. 3), 2021년 4분기 생산성리뷰.

6) e-나라지표 지표상세보기(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16&board_cd=INDX_001)

-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2013년과 2017년 큰 폭 향상되기도 하였으나,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임.
 - 2011년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104.1,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106.9였으나, 2021년의 노동생산성지수는 2015년의 기준값인 100을 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과 산업생산(또는 부가가치)의 비율로 결정되는데, 최근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감소는 산업생산 감소에 따라 나타난 것임.
 - 2014년~2015년 나타난 노동생산성 감소는 노동투입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컸으며,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노동생산성 감소는 건설산업 생산량 감소의 영향이 큼.

<그림 2> 건설산업 노동투입량 및 산업생산 추이(2011년~2021년)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투입량지수 및 산출량지수.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의 노력 필요

- 지난 몇 년간 건설산업에서는 생산체계 개편, 연구개발(R&D) 투자, 스마트건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옴.
- 하지만, 최근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국내 생산자물가지수는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심화시킬 요인이 커지고 있음.
- 건설 비즈니스 환경 악화에 따라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건설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효율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건설업의 수익성 하락과 침체, 올해도 재현될 듯

- 건설업 자기자본수익률 분석(2009~2020)을 통한 전망, 각종 악재로 불안감 가중 -

■ 듀폰모델을 이용한 자기자본수익률 분석

● 듀폰모델은 자기자본수익률을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그리고 레버리지비율로 분해해 수익성 변화 요인을 분석함.

- 투입된 자기자본 대비 수익으로 정의되는 자기자본수익률은, 기업이 자본을 사용하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임.

자기자본수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당기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산 * 총자산/자기자본

- (당기순이익/매출액)으로 정의되는 매출액순이익률(단위 : %)은 적립이나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순이익을 생산할 수 있는 경영능력 측정을 위해 인용될 수 있음.

- (매출액/총자산)으로 정의되는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활동성 지표임.

- (총자산/자기자본)으로 정의되는 레버리지비율 혹은 자기자본승수는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기자본비율을 100으로 나눈 몫의 역수임.

● 분석을 위해,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 국내 영리법인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서류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연간 기업경영분석」에서 인용한 2009~2020년 기간 동안 건설업의 재무비율을 사용함.

- 분석 기간을 2009~2020년으로 정한 이유는 「2011년도 기업경영분석」부터 국세청 행정자료를 이용한 모집단 집계방식으로 변경됐고 이 방식은 사후적으로 2009년도 자료까지 소급 적용됐기 때문임.

■ 분석결과

● 건설업 전체 그리고 세부 분류 모두에서 자기자본수익률 및 그 변동은 매출액순이익률 및 그 변동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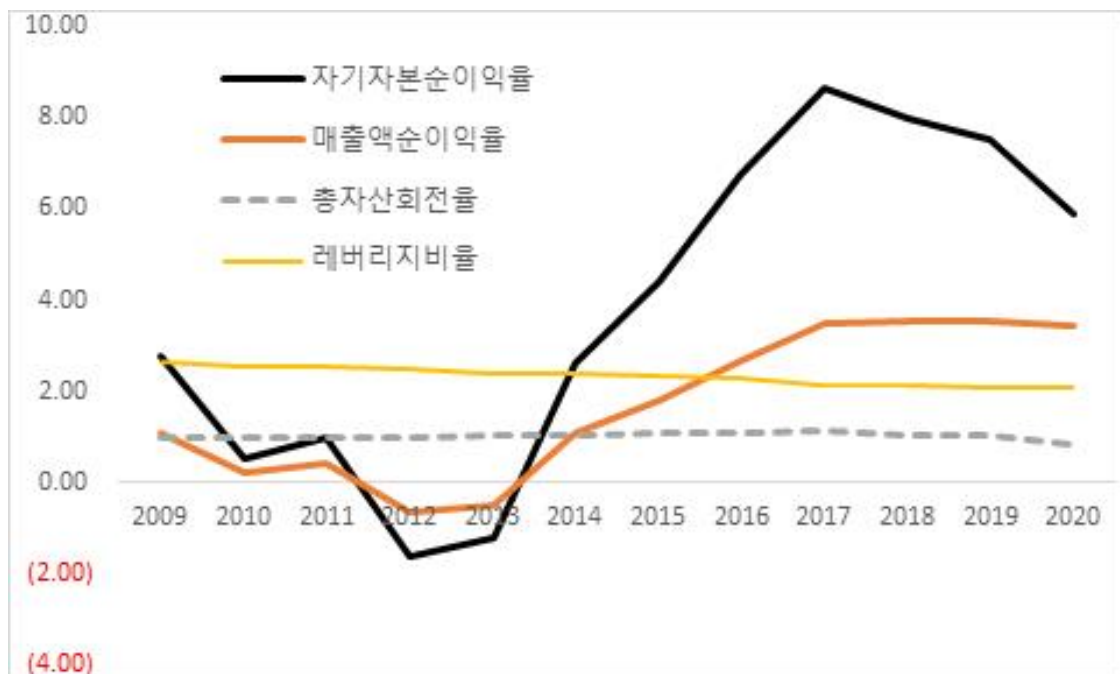
<표 1> 자기자본 수익률 및 그 변동의 구성요소 및 그 변동 대비 상관계수

		건설업	대기업	중소기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자기자본수익률	레버리지비율	-0.78214	-0.80333	0.00927	-0.77856	-0.73471
	매출액순이익률	0.98224	0.990887	0.929353	0.98916	0.964026
	총자산회전율	0.349873	0.570332	-0.06861	0.281809	0.437331
자기자본수익률 변화량	레버리지비율 변화량	0.033633	0.163239	-0.38362	0.082205	-0.21831
	매출액순이익률 변화량	0.975537	0.988596	0.767263	0.985719	0.96402
	총자산회전율 변화량	0.51226	0.440607	0.411129	0.454895	0.382037

자료 : 한국은행.

- 건설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012년과 2013년에 (-)값을 가졌는데 해당 연도 매출액순이익률도 (-)값을 가졌음.
- 건설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010년과 2012년 그리고 2018~2020년 기간에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2010년과 2012년에는 매출액순이익률, 레버리지비율, 총자산회전율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함. 반면 2018년에는 총자산회전율만 감소했고 2019년에는 총자산회전율과 레버리지비율이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이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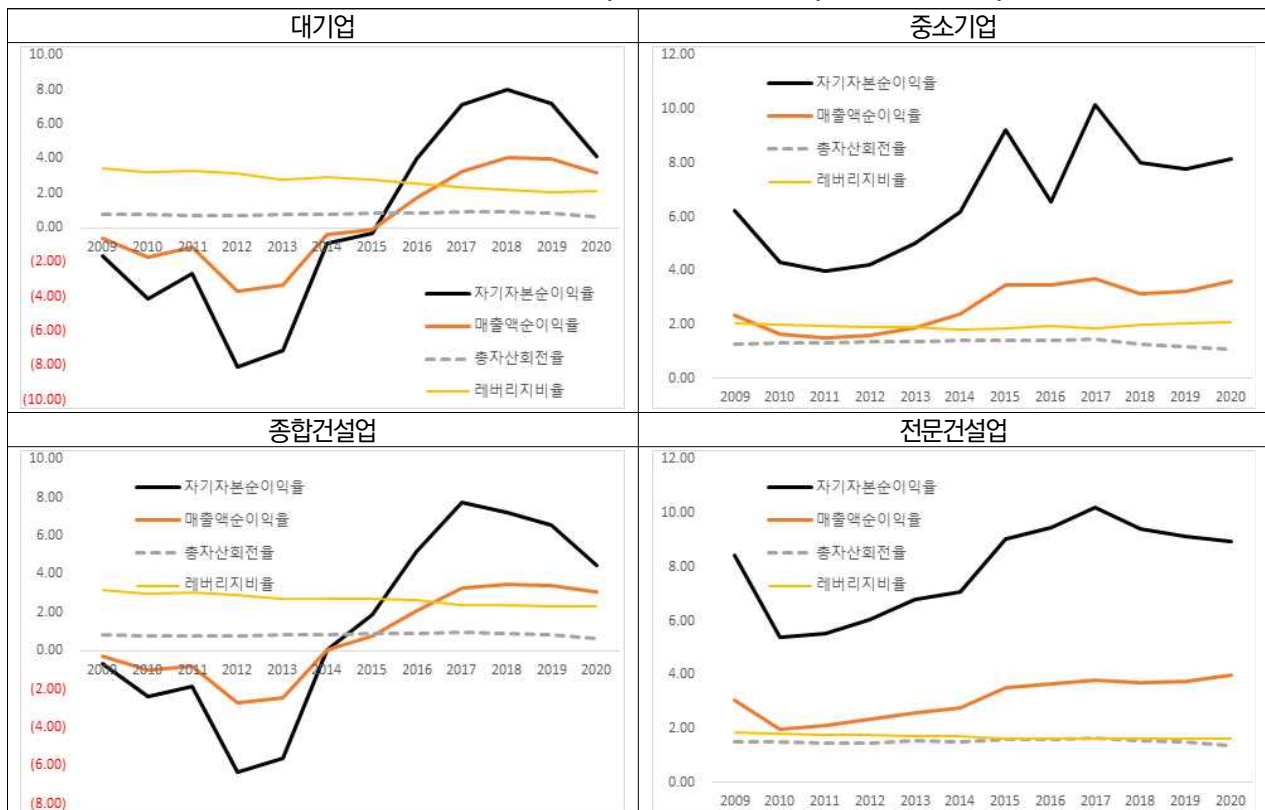
<그림 1> 건설업의 자기자본수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레버리지비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건설업 세부 분류별로는 대기업이 종합건설업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문건설업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그림 2> 건설업 세부 분류별 자기자본수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레버리지비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대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값을 가졌는데 동기간 동안 매출액순이익률도 (-)값을 가졌음.
 - 대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010년과 2012년 그리고 2019~2020년 기간에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대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 하락은 매출액순이익률, 레버리지비율, 총자산회전율의 하락을 동반했음.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010~2011년, 2016년 그리고 2018~2019년에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2010~2011년, 2016년 그리고 2018년에는 매출액순이익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음.
 - 2010~2011년에는 레버리지비율의 하락이, 2018년에는 총자산회전율 감소가 매출액순이익률 하락과 동시에 발생함. 2019년에는 자기자본수익률은 상승했으나 레버리지비율과 총자산회전율이 하락했음.

- 종합건설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009~2013년 기간 동안 (-)값을 가졌는데 동기간 동안 매출액순이익률도 (-)값을 기록함.
 - 종합건설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010년과 2012년 그리고 2018~2020년 기간에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2010년과 2019년 하락은 매출액순이익률, 레버리지비율, 총자산회전율의 하락을 동반했음. 2012년 하락은 매출액순이익률과 레버리지비율의 하락을 동반했음. 2018년 하락은 레버리지비율과 총자산회전율의 하락을 동반했음. 2020년 하락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하락을 동반했음.
- 전문건설업의 자기자본수익률은 2010년 그리고 2018~2019년 기간에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2010년과 2018년에는 매출액순이익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음.
 - 2010년에는 레버리지비율의 하락이, 2018년에는 총자산회전율 감소가 매출액순이익률 하락과 동시에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총자산회전율만 하락했고 2020년에는 레버리지비율과 총자산회전율이 하락했음.

■ 시사점

- 수주산업이라는 특징과 건설업의 장기 생산기간을 고려하면, 건설업 자기자본수익률의 개선은 총자산회전율 증가가 내포하는, 박리다매 방식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고 매출액순이익률의 개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음.
- 2020년 건설업의 자기자본수익률 하락을 동반하고 있는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 감소를 통해서 건설업의 수익성 하락이 활동성 침체를 동반했음을 알 수 있음.
 - 건설업 세부분류 분석에 의하면, 2020년 수익성 하락과 활동성 침체가 동시에 확인된 것은 대기업과 종합건설업이었음.
- 가중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건설업의 수익성 하락과 활동성 침체는 2022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큼.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관심(關心)과 간섭(干涉)

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간섭.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국어사전에 나오는 관심과 간섭에 대한 정의를 보고 있자면 간섭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만 관심은 좋게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관심과 간섭은 아주 가깝게 붙어 있다. 설사 떨어져 있다고 한들 종이 한 장 차이이지 않을까 싶다. 관심을 두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어느 순간에 관심은 간섭이 돼버린다.

관심과 간섭 간의 모호한 경계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다. 부모는 관심이라고 하지만 자녀는 간섭이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경계는 정말 한 곳 차이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도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녀에 관한 관심이 없다면 간섭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자녀에게 간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싫다고 부모가 관심을 거두는 건 무책임함 이요 포기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일 자리를 창출하는 건설산업에 관한 관심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남다르니 그 크기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관심 속에는 잘 해내리라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종종 실망감으로 바뀐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산업환경이라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고 실망스럽다.

이러다 보니 어느새 건설산업에 관한 기대 섞인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간섭만 늘어나고 있다. 기업을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테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각종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기업은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며 불멘소리를 하지만 먹힐 리가 없다. 지금은 기대보다는 불신

이 가득하다. 매스컴을 통해 건설산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 쉬어지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부실시공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 이력 관리, 품질관리자 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 품질관리 강화 방안과 공사 중지 실효성 확보, 전문기관 안전관리, 감리교육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감리 내실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부실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징벌 손해배상 확대 등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걸 두고 지나친 간섭이라 말할 수 있을까.

최근 건설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공급망 교란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유인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러하데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와 처벌 강화가 산업을 뒤덮고 있다. 관심에서 출발한 지원은 없고 간섭을 위한 쓴소리가 가득하다.

어떻게 해야 간섭받지 않고도 제대로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산업을 위해 우리가 정한 규칙과 제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 주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자. 그 래야만 기대 섞인 관심을, 간섭하지 않아도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아주경제, 4.6>